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도시·군기본계획을 국토부가 '국토계획 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서 평가기관인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도시·군기본계획은 198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시·군의 미래상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도시의 공간적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시정책이나 관리방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지침서다.

수필의 향기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남광주시장 입구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릴 때였다. 건너편 병원에 갈 때는 지나쳤는데, 치료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릴 때야 보았다. 승차장 옆에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기 고



오 미 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

한국인이려면 뭐니뭐니해도 밥심이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안부를 물을 때조차 '밥 한 번 먹자'라는 인사를 나눌 정도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쌀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2000년 초반 참여정부(노무현대통령)는 대통령직속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두고 중앙정부의 각종 승인 및 결정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더 이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에 간여할 수 없게 된 국토부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가면서도 지방정부의 수용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던 것 같다.

결국 국토부는 국토계획에 관련한 권한이양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국토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는 국토종합계획을 정점으로 국토계획 간 종합성·연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했다.

국토계획 평가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분권화 추세에 역행하는 추가적 규제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가의견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아서 지자체도 이 제도를 문제 삼지 않았다.

평가기관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5만 명의 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20년 후 목표인구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몇 천명을 삭둑 잘라서 제시하면 지자체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은 중앙정부의 업무규기보다는 지방정부의 몫이다. 현행법상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도에 도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다.

부끄러움

를 사는 이도 있고, 부러 폐지를 올려주거나 수레를 밀어주는 이도 있었다. 외면하거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탄 이들이 대다수였지만 "자식이 없을까, 젊어서 무일 했을까." 혀를 차는 이도 없지 않았다.

굵은 허리로는 폐지를 좁다랗다 납작납작 골목을 쓸고 다니는 이들, 처마 밑이나 길거리에 납작 엎드려 채소를 다듬거나 마늘을 까는 할머니들, 납작납작 엎드려 밭을 때는 여인들과 희색빛 하늘, 납작납작한 박수군의 그림을 보는 듯했다.

포장마차 아줌마가 막 구워낸 호떡같이 납작한, 철거민의 땅치에 납작해진 집과 담 같은, 아이들이 노는 비석 치기 돌처럼 둥글납작한, 80년 군부정권에 잡혀 두 손이 묶인 채 아사팔트에 납작 엎드린 시민군 같은...

조금 높으면 애당초 바라보기조차 않았기에 저리 낮은 곳에 사는, 처마 밑 제비집 같으면 죽한 삶을 살아온, 낮게 낮게 흐르는 물처럼 낮게 살고 바위라도 만나면 깜짝 놀라 금방 휘둘러 흘러왔을 이들.

과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온 걸까. 개똥 같은 세상일지라도 모진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더 아무치게 사는 모습 같았다. 잊속이 빠르지 못하고 눈치가 없거나 영악하지 않아서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하고 밑바닥에 딱 붙어사는 사람들. 시시포스처럼 바위 같은 생의 무게를 반복해서 매일매일 올리는 게 삶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들 같았다.

스가 낮다고 투덜대거나 세상이 사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지 않는가 불평하다가 익숙이 있으면 제일 앞장서는 눈치 빠른 나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닌가.

힘 있는 자들 앞에서 함구하고, 불리한 일 앞에서는 눈 감아버리는 창피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남이 보지 않는다고 마구 침을 뱉고 콩초도 버리면서 아무 일 없었듯 농성을 떠는, 게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절실하게 사는 이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진정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닌가.

6·25와 보릿고개를 겪은 노인들, 세상 구석 변방에 밀려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기꺼이 노를 저었고, 거리의 젊은이들에게 주먹밥을 건네주고, 주린 아이를 위해 자기 젓가슴을 내주던 용기 있던 사람들이다.

혹시 우리는 지금 남의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에 분개하면서 우리 안의 지역 차별이나 외국인 차별, 여성이나 노인의 가난이나 비하를 서슴지 않고 또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수줍은 많은 나는 그 옛날 간혹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에도 부끄러워한 적이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부끄러워할 일을 하고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양 태연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때가 많다.

자기 부끄러움은 애써 망각하고 사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부끄러움, 제 부끄러움 모르는 지금 세상이 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쌀값,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원인은 재고 물량이 많아서다. 재고 물량의 38%는 수입쌀이다. 쌀값이 내려가더라도 보통 비수확기에 접어드는 6월부터는 반등하게끔 정부가 수급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쌀값 반등은 커녕 단경기(7월-9월) 쌀값이 수확기(10월-12월)보다 하락하는 '역계절전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은 '피땀 흘려 농사지으면 뭐하냐' 싶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재고량을 안고 있는 농협 역시 올 봄부터 역계절전복에 의한 경영난 심화를 겪어본 터라 쌀을 쌀값에 팔아버리려는 투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쌀 공급량이 증가하면 쌀값 하락 현상은 당연하다는 걸 초등학교도 알고 있다. 그리고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농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천정부지로 솟았다는 건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프다.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 문제를 우리 정부가 위기감이란 걸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비축미가 시장에서 제대로 격리되지 않는다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대규모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결정은 겨우 5만 톤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한 것 뿐이다.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량 감소와 이에 따른 농가 소득 하락, 농촌 인력 부족 등 농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앞세웠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 평가' 보고서에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 불용액이 2020년 22억 원에서 2023년 21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예산의 불용 문제와 2020년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된 지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정책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와 재배면적의 감소, 지급대상 면적이 인증 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 미흡, 관리 체계 부진, 부정수급 문제들을 지적했다.

쌀값 하락과 공익직불제 불용액이 증가하는 와중에 정부가 말하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 공약이 이행 될지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쌀값의 하락은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닌 농민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급급해 보인다.

생산비와 물가는 날로 상승하고 한 끼 밥값도 오르는 데 쌀값만 역행하고 있다. 정부에 묻는다. '쌀값 정말 이대로 좋은가? 기후위기 속 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갖추지 못한다면 한국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

농업의 위기는 전 국민의 식량주권과 직결되고 우리 국민들의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책임농정이 실현돼야 한다. 농업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기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농협이 보유한 초과 재고량 20만 톤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社說

국힘 새 지도부 '광주 패싱' 개선 의지 보여야

윤석열 정부 들어 광주·전남에 대한 패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에 대한 패싱 논란은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주가 전남과 별도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줄곧 패싱해오다 가장 늦게 일정을 조율중이니 말이다.

정부가 이렇다 보니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에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패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현안사업이다. 예산에서 소외되면서 미래 전략산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민선8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1호 상생 사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타일이 대표적이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당 지도부에 광주 패싱을 멈추고 지역 현안사

업 반영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경철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한동훈 당 대표를 만나 내년도 예산에 광주시 현안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 지역위원장의 요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새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한 것은 광주 패싱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말로만 취약지인 호남의 중요성을 거론한 안된다. 진정 호남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선거가 끝난 시점에 호남이 최소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광주 패싱이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예산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개인 위생 등 방역 철저를

우리나라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의 수준 높은 방역 참여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극복했다. 하지만 여름 전국은 물론 광주·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확산세가 빨라 코로나 재유행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팬데믹 공포마저 번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표본감시 병원(14곳)에 신고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1주차 2명을 시작으로 매주 늘더니 급기야 한달 만인 8월 1주차에는 무려 85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표본감시 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받은 환자, 계절의 특성상 냉방병이나 여름 감기 등으로 오인해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수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진단 키트나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엔데믹 이후 약국들의 보유량이 적어 조만간 방역 물품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

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 점은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KP.3'가 빠르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5월1일 코로나 단계를 3단계인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낮추면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방역 표본감시 병원(14곳)에 신고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1주차 2명을 시작으로 매주 늘더니 급기야 한달 만인 8월 1주차에는 무려 85명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금 당장 코로나 단계를 격상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확진자는 예전같이 의무는 아닐지라도 적극 격리하거나 쉴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도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과 관계없이 검사 완화가 필요한 최소 기간인 2-3일 정도는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방역체제를 가져야 한다. 대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19 초기 단계로 돌아가, 온 국민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도리밖에 없다.

無等鼓

지난달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동원돼 노역을 했던 통탄의 역사 현장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유산 시기를 16~19세기인 에도시대로 한정해 등재를 추진했다.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된 근대를 배제하려는, 만행의 역사를 감추기 위한 의도였다.

그럼에도 사도광산 등재가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 때문이었다. 하나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품을 설치한다는 권

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79주년 광복절은 어느 해보다 시끄럽고 안타까웠다. 심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이슈를 압도할 만큼 휘황성이 강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친일' 논란에 휩싸인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하며 정부 주관의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 국민의 힘은 경축식 불참은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대응했다.

사도광산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슬한 외침을 받아왔지만 밝혀도 다시 일어서는 풀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왔다. 사마천은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술왕사 지래자'(述往事 知來者)라 했다. '지난 일을 토대로 다가올 날을 알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의 출발은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는 데서 비롯된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물론 이에 동조하는 '친일'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headers, contact information, and a note about subscription rates.